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2025. 1. 3.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 02-2670-9221 팩스 : 02-2670-9299 전자우편 : 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1. 세계경제	1
1) 트럼프의 귀환으로 무역전쟁 확대	1
2) 세계경제 저성장 고착화	3
3) 브릭스의 부상과 다극화	3
4) 주요 국가 경제전망	3
2. 국내경제	6
1)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6
2) 트럼프 2기 한국경제의 충격	8
3)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8
3. 시사점	10

요약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책, 보호무역 등의 후파로 최근 3.0% 수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귀환으로 근린공핍화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체제는 해체되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독일, 한국 등 대외의존성 큰 국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G7에 대응하여 브릭스+(9개국)는 남반부 국가들의 경제적 자율성과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으로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면 대외의존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파로 한국은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아 현지생산으로 이전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이 축소되어 현지 자회사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 대기업들은 납품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 10배 증액과 고가 무기 수입을 압박하여 한국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면, 에너지 등 저렴한 원자재 수입과 거대한 수출 시장을 축소해 무역수지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도 인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처럼 자주적인 외교통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감소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동차, 석유화학,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맹추격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가운데,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경제도 침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기업 시장만능 정책은 물가폭등과 소비침체 속에서도 재정 준칙으로 긴축정책을 지속하며 복지재정을 줄이고 노동자·농민·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억압하였다.

수출과 내수 침체로 한국은 L자형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2010년대 3%대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수준으로 하락하여 정체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의존, 친기업 정책을 타파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하다.

1. 세계경제

1) 트럼프의 귀환으로 무역갈등 확대

트럼프는 대중국 강경파, 보호무역주의자들을 경제수장에 앉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에 따르면 첫째, 높은 관세를 물려 타국의 미국 수출을 줄이고 현지생산으로 전환하게 압박하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 수출(중국산 철강, 자동차 등)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규제폐지,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을 보장한다. 셋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여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 넷째,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 등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 다섯째,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고율 관세를 물리고 최혜국 대우 폐지, 수출통제 확대, 디커플링 등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먼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천문학적 달러를 발행하고 무역흑자를 본 타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가 순환하는 메커니즘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인상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값싼 중국산 생필품을 샀던 미국 저소득자들과 중국 원자재와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했던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 미국의 소비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역전쟁이 확산하여 공급망이 제약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으며 세계 GDP가 0.8% 감소할 수 있다(IMF).

2) 세계경제 저성장 고착화

세계경제 성장률(구매력 평가기준)은 2024년 3.1%, 2025년 3.0%(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치)로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인 3.7%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 수준의 성장률에 머물러 있고 신흥국들은 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IMF는 향후 5년간 세계경제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3% 수준의 성장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높은 부채 수준(세계 공공부채가 세계 GDP의 93%로 최초로 100조 달러 돌파 예상), 지정학적 갈등(러-우 전쟁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교역감소가 장기적으로 세계 GDP의

7%에 이를 수 있음),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때문이다.

팬데믹, 전쟁, 보호무역 등으로 공급망이 차단되어 2022년부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였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천문학적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은 재정 능력을 상실하였다.

유례없는 고금리 정책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2024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공공요금, 전기료, 생필품 가격이 높이 치솟은 상태에서 다시 2%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떨어지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크고 소비 여력이 없다.

침체를 막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각국은 유로존을 선두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지속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여 강달러가 형성되고, 미국과 금리 차이 등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한국 등 국제통화가 아닌 종속적인 나라들은 금리인하가 어려워져 경기부양 수단이 상실될 수 있다.

3) 브릭스의 부상과 다극화

브릭스는 2024년 1월부터 이집트, 에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새로 가입하여 기존 5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였다. 브릭스+는 2023년 말 기준 세계인구의 45%인 36억명, GDP(PPP 기준) 규모의 36%를 차지하여 G7(GDP 규모 30%)을 추월하였다.

브릭스는 2024년 10월 카잔에서 16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6개 국가 정상과 유엔 등 6개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서 총 5,255명의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여 134개 합의사항을 채택하였다.

브릭스는 카잔회의를 통해, 서구 중심의 일극 체제의 마감과 다극화 세계질서로 지향점을 분명히 했고,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 남반구 국가들이 경제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는데,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3개국을 준회원국으로 지정하여 브릭스(9+13)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0개국 이상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중 13개국(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파트너국(준회원국)으로 지정되었다.

둘째, 브릭스는 ①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을 대체할 플랫폼으로,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브릭스 브릿지를 구축하고, 외국에서 QR코드를 통해 자국 화폐로 지급하는 결제 플랫폼인 브릭스 페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와 함께, 달러 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11월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 시켰다. ③ 곡물, 상품 등은 브릭스 회원국이 대부분 생산하는데, 그 유통은 서방의 시카고나 런던의 상품거래소가 장악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서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브릭스 곡물거래소 설립이 제안되었고 이를 원자재거래소로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④ 브릭스 공동통화(유닛)로 금 40%와 브릭스 9개국 통화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 디지털화폐를 내년에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다. 자국 통화를 쓰면서 국가 간 교역통화로 브릭스 유닛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조 달러(약 5,800조원) 상당의 공동통화를 신개발은행이 보유하여, 새로운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홍익희, 글로벌 경제전쟁과 비트코인의 미래).

셋째, 브릭스는 유엔과 WTO(다자간 자유무역)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유엔과 IMF 기구에서 남반구 국가들의 대표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과 서구가 주장하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이들의 일방적인 제재가 대상 국가의 인권과 취약계층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브릭스는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마비된 WTO 상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상소위원회는 국가 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기구인데, 임기가 끝난 상소위원 선임을 미국이 반대하여 수년째 상소기구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 주요 국가 경제전망

① 미국

미국은 팬데믹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부양에 나섰는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2023년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하여 투자와 소비심리 지표가 위축되고 2024년 하반기 불황을 예측하였으나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착륙하고 있다. 연준은 2024년 하반기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4.5%로 낮아졌는데, 2025년은 두 차례 인하 또는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이점으로

세계의 자본, 공장, 기술인재, 글로벌 공급망 등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여 자국의 물가를 잡고, 고금리를 따라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 우선주의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인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고 4배나 비싼 미국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축통화국으로 위기 때마다 달러를 발행하여 외국 상품 구입, 적자 대금 결제, 유동성 공급 등으로 부채경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전쟁과 군비경쟁 환경을 만들어 서방 자본의 진출 영역을 확장하고 첨단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GDP의 120%로 35조 달러가 넘고 1년 이자만 1조 1,300억 달러(약 2,510조원)에 달한다. 부자감세로 추가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는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제약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다극화 추세는 자국 통화 사용과 결제를 늘려 기축통화에 기반한 부채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게 할 것이다.

② EU

유로존¹⁾은 1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성장률이 2023년 0.4%, 2024년 0.7%, 2025년 1.3%(예측)에 머물면서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와 식료품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러시아는 PNG(파이프라인)로 EU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6%를 공급하였으나 전쟁 이후 거의 중단되었다. 반면 EU가 수입한 LNG(액화천연가스) 중 미국산 비율은 2020년 23%에서 2023년 47%로 증가하여 미국은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이 되었다. LNG는 액화 공정이 필요해 파이프라인 방식보다 가격이 4배나 비싸다. 또한 러시아의 밀, 콩 등 식료품 공급 감소, 미국의 중국 제재 동참으로 대중 무역감소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유로존 GDP의 30%를 차지하였으나 2023, 20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였다.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한 독일 제조업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생산단가가 2~3배 이상 상승하고, 석유화학 제품가격 상승,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1,000억 유로의 방위비 약속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1) EU 중 유로화를 쓰는 나라 20개국.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 공통의 통화정책 실행.

또한 미국과 중국에 자동차, 기계, 화학 물질 등 고품질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미중갈등과 보호무역으로 무역이 침체하면서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 최근 폭스바겐, 보쉬 등에서 공장폐쇄로 50만 명의 감원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관세 폭탄으로 대미 무역수지도 악화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무엇보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임금 상승률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10%포인트 더 높다. 고용 창출 여력이 줄어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가 독일(0.91), 영국(0.62), 프랑스(0.22)를 기록하였고, 2024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43 수준이고(50 이하면 침체), 산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지수도 100을 넘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중산층까지 가난해진 EU는, 미국보다 먼저 2024년 6월부터 세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EU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이유가 ‘고용 유연성 부족’, ‘과도한 복지’, ‘미국보다 짧은 연평균 노동시간’ 때문이라면서, 미국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복지축소’, ‘고용 유연화와 노동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주장들이 강화되고 있다.

③ 일본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은 2023년 1.7%로 깜짝 성장하였으나, 2024년 0.4%로 하락하였고, 2025년 성장률은 1.0%로 예측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일본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2023년 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였다. 마이너스 금리와 미일 금리차이 등으로 2023년 엔화 가치가 30%나 하락하였다. 엔저 효과로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렸고 주가도 상승하는 경기회복 분위기에서 2024년 춘투로 임금상승률이 5%에 달하면서 물가상승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하락하여 개인소비 회복세는 미약했고, 수출기업과 달리 내수 중소기업은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엔저 장기화의 부작용(생활물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2024년 3월 0.1%, 7월 0.25%로 인상하였다. 7월 금리인상은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수입 물가를 잡아 경제지표 개선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다. 그러나 7월 주가 대폭락 등 금리인상의 파장이 엄청나서 이후 기준금리는 3회 연속 동결되었고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금리인상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첫째,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엔 캐리 투자를 청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하였다. 엔화 강세로 엔 캐리 투자 중 가능성이 있는 33조엔(2천억 달러)의 청산이 일어나면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이 크게 우려하였다.

둘째, 2024년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예측치인 1.0%에 크게 미달하여 일본경제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조급한 금리인상으로 소비와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의 260%가 넘어,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원리금 상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5년 전망은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엔저 효과 감소 등으로 수출감소, 기업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2024년 0.4% 성장의 기저효과, 인공지능과 탈탄소 부문의 기업투자 증가, 이시바 새 내각의 경제정책 등으로 1.0% 성장이 예측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④ 중국

중국은 2023년 5.2%, 2024년 4.8%(예측)로 성장으로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2025년은 4.5% 성장을 예측한다(OECD). 중국경제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며, 신냉전 공급망 재편 속에 해외 수요감소와 내수 침체로 성장이 둔화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국경제의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과 가격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위기에 빠졌으며, 연관된 건설업과 철강업에 대한 투자가 심하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과잉투자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무려 60조 위안(1경 1,700조원)으로 추정된다(골드만 삭스).

또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견제로 수출 수요가 감소하였고 트럼프의 귀환으로 2025년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인도,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의 고관세와 제재를 피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생산기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중국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2024년 하반기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2주택자 계약금 비율 완화’

둘째, ‘2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노후화된 제조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하고 스마트가전과 전기차에 보조금 확대 등으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셋째, ‘5년간 10조 위안(1,900조원)을 투입하여 지방정부 부채를 감축하고, 지방정부는 6,000억 위안의 이자를 절감하여 그 자원을 투자와 소비 촉진에 투입’

넷째, ‘유희토지 및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상업은행에 자본투입’,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다섯째,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위안화 절상’

정부는 부동산, 건설, 철강, 인프라 등 구경제가 고성장을 마감했으므로, 과거 고도성장에서 5% 수준의 중성장으로 전환하고, GDP의 40%에 불과한 내수의 비중을 높여 수출증가율 둔화를 보완하려고 한다. 반면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신경제는 신성장동력으로 중국경제를 이끌어 갈 전망이며,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화웨이가 7나노미터 칩을 개발하는 등 자립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산업도 모바일시장과 결합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다.

과학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 순위에서 중국에 2024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스프링거 네이처는 최상위 학술지에 게재되는 과학논문 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별·기관별 순위를 매긴 2024년 네이처 인덱스를 발표했는데, 2022년 중국의 상위 논문 점유율이 미국과 EU를 합한 것보다 컸다. 또 유전공학, 양자 기술, 우주탐사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은 2024년 과학기술 예산으로 71조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2000년 연구·개발 액수의 16배이며 중국 대학은 매년 140만명 이상의 공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⑤ 러시아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202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3년 3.6%, 2024년 3.7% 성장으로 반전했으며, 2025년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측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

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러시아는 미국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인도에 값싼 에너지를 수출하고, 유럽에서도 국적을 알 수 없는 선사를 통해 EU 국가로 원유를 수출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지만 중국·브릭스 등과 무역을 확대하고 결제에서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

에너지 제재가 효과가 없자, 미국은 다시 러시아산 광물 제재를 추진하여 G7 재무차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팔라듐(전 세계 생산의 40%)과 티타늄(전 세계 항공부문에 쓰이는 양의 1/3)에 대한 제재 검토를 요청하였다.

러시아는 제재 속에서도 2차세계대전과 냉전체제 경험에 기반하여,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생산하는 전시생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신병을 모집하고, 인력이 귀해 군수산업 및 민간부문도 임금이 상승하는 등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연방 통계청에 의하면 러시아 실질임금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2.9%나 올랐고, 2024년 하반기 실업률은 2.4%로 역대 최저치이다. 2025년 러시아의 1,420억 달러 군사·안보 지출은 예산의 40%, GDP의 8%가 넘는다.

2. 국내경제

1)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화폐가치는 그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지표를 나타내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엄선포 전 1,425원에서 12월 31일 1,473원으로 상승하여 원화가치가 3.37%나 하락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침체’, ‘외화 차입 비용 증가’,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보유고 투입’, ‘환율과 주가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투입’ 등을 초래한다. 실제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이탈하여 12.3 비상계엄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 1.8%가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가 신뢰도 추락에 따른 비용’과 ‘국내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손실’ 등도 추가된

다. 실제 계엄 직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헬기생산 현장 방문을 전격 취소했고,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되면서 방산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체코 원전 수주도 불안해진 상태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도 12월 87.0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에서 군사독재 국가와 같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발생했고 수구세력들의 저항과 시간 끌기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과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안정화되기까지 5~6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경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한국을 기피할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직간접 투자와 무역이 정체되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2월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7%로 12월 8일 하향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5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면 실질 GDP 감소는 2조 3,000억원 정도이다. 내란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0.5~1.0%포인트 하락할 경우 GDP 감소 규모는 2025년만 12~23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²⁾.

2) 트럼프 2기, 한국경제의 충격

트럼프 2기는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해 미국 현지생산으로 전환을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 시절에는 보조금으로 동맹국의 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보다 관세 압박으로 미국 투자를 강제할 것이다. 대중국 60% 고율 관세 추진은 한국의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대중 무역규제를 강화하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여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트럼

2) 류덕현(2024),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

프 관세정책으로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0조원)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실질 GDP를 0.24%~0.67% 감소시킬 것으로 보았다.

한편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선호하지만, 고관세는 수입 물가를 올리고, 감세정책은 재정 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하여 금리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연착륙이 가능한 미국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지만, 경기부양이 필요한 한국은 금리인하가 필요하여 한미 간 금리차이는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할 수 있다. 환율조정 에 외평기금과 국민연금 등이 지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이미 외환보유고는 2021년 4,631억 달러에서 2024년 11월 4,153억 달러로 감소했고, 외평기금은 정부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어 수습조 원이 축소되었다.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환율방어로 손실이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트럼프는 1기 때와 같이 한국에 값비싼 무기 수입을 요구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배(약 14조원)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3)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산업부는 2024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2024년 수출 6,838억 달러는 2022년 6,836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2년 전과 비하면 명목으로도 제자리걸음이며 저유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달성한 것이다. 반면 2024년 수입은 2년 전보다 약 1,000억 달러 줄어 2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5년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 (2025년 수입 6,320억 달러)로 인한 불황형 흑자이다.

[표 1] 한국 수출, 수입 추이 (억 달러)

년도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6,440	6,836	6,322	6,838
수입액	6,150	7,313	6,425	6,320
중국 수출액	1,629	1,557	1,248	1,330
중국 무역수지	242	12	-180	-68
아세안 수출액	1,088	1,248	1,091	1,140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세안은 5개국

[표 1]을 보면 호전되었다는 2024년 대중국 수출은 1,330억 달러로 2021, 2022년에 미치

지 못하며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이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한 결과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4년 아세안 수출액도 2022년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중국의 산업경쟁력 상승으로 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추격 속에 한국이 2024년 석유화학 설비를 과도하게 늘리는 정책 실패로 충격이 컸다. 화학산업의 대표주자인 롯데케미칼은 2022년, 2023년 각각 7,600억원,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3분기까지 6,60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철강도 글로벌 과잉공급, 중국산 저가 수출 등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는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메모리 등이 급성장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AI 기술과 함께 부상한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경쟁력을 잃으면서 시가총액이 작년 1월 524조원에서 올해 1월 354조원으로 추락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 폭탄, 중국·유로존 경기침체 등으로 2025년 수출증가율을 1.8%로 전망했는데, 2024년 8.2%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추락이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1.9%, 철강 -0.3%, 2차 전지 -6.7%, 정유 -7.5%, 섬유 -1.9% 증가율 감소가 예상된다. 단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업,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는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과거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했지만 1,500선에 근접하는 환율은 원자재, 중간재 등 수입 가격을 올려 수출기업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품목별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D)를 보면 [표 2]에서 중화학공업 소계가 2024년 4/4분기 103.0에서 2025년 1/4분기 95.2로 떨어진다. 동기간 석유제품, 철강, 기계류, 가전, 전기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반도체, 선박,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모두 하락한다. 증가하는 품목은 화학공업,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3개뿐이다.

[표 2] 중화학공업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품목	2024 4/4	2025 1/4
소계	103.0	95.2
석유제품	70.6	98.9
화학공업	113.8	121.5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66.2	64.1

기계류	79.6	91.9
가전	97.5	52.7
전기·전자제품	104.2	85.3
무선통시기기 및 부품	99.6	94.0
반도체	135.2	64.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98.7	130.7
선박	146.7	146.4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104.7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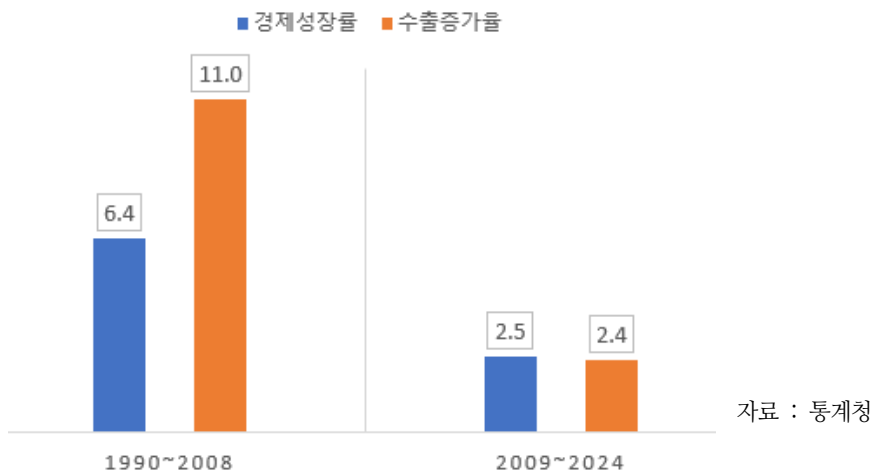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무역협회(2024.12.27.)

* 경기전망지수 기준
150이상 매우 호조
110~150 호조
90~110 보합
50~90 부진
50미만 매우 부진

최근 한국의 수출감소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맹추격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가운데,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22년 54.2%였는데 2024년 9월 37.9%로 낮아졌다. 중국은 레거시(구형) 반도체 자립으로 세계 D램 생산 점유율을 2022년 4%에서 2025년 16%로 올릴 예정이다(모건스탠리).

과거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던 수출증가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잠식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1990~2008년 기간에는 수출증가율(평균 11.0%)이 경제성장률(평균 6.4%)을 견인했으나 2009~2024년에는 수출증가율(평균 2.4%)이 경제성장률(평균 2.5%)을 잠식하고 있다.

[그림 1]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내수경제는 가계부채 증가, 건설투자 부진, 소비심리 저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경기 회복에 의존했던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며 성장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의 내전 상태인 탄핵 찬반 충돌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치 불안정이 커지면 2025년 성장률이 1.7%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

공공요금 등 물가폭등 속에서 실질소득과 실질임금이 3년째 하락하였고, 2024년 하반기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과거 60%에서 크게 하락한 47~48% 수준이며,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2022년 50만개, 2023년 17만개 2024년 9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하기가 힘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선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이미 3.0%인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현재 4.5%인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확대해 환율상승과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연준은 2025년 금리인하를 완만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2월)에 따르면, [표 3]에서 가계부채는 2024년 3분기 1,91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로 증가하였다. 이중 가계대출이 1,796조원이고 판매신용은 118조 원이다. 가계대출 차주의 가계 빚은 1인당 9,500만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1,064조원으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53%에서 2024년 3분기 1.70%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표 3] 가계부채(가계신용)와 기업대출 잔액 추이 (조원)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계부채	1,726	1,863	1,868	1,886	1,914
기업대출	976	1,067	1,170	1,248	1,327

출처 : 한국은행, 2024년 가계부채는 3분기, 기업대출은 11월 통계

[그림 2]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금융권 대출이 0.95인데, 은행권 대출은 양호하며,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은 기타대출 2.73, 전체 2.18, 주택담보대출 1.10으로 높다.

기업대출은 2024년 3분기 1,32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을 보면, 전체 금융기관 기업대출 연체율은 22년 1분기 9.8조에서 24년 1분기 17.3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하여 연체율이 2.43%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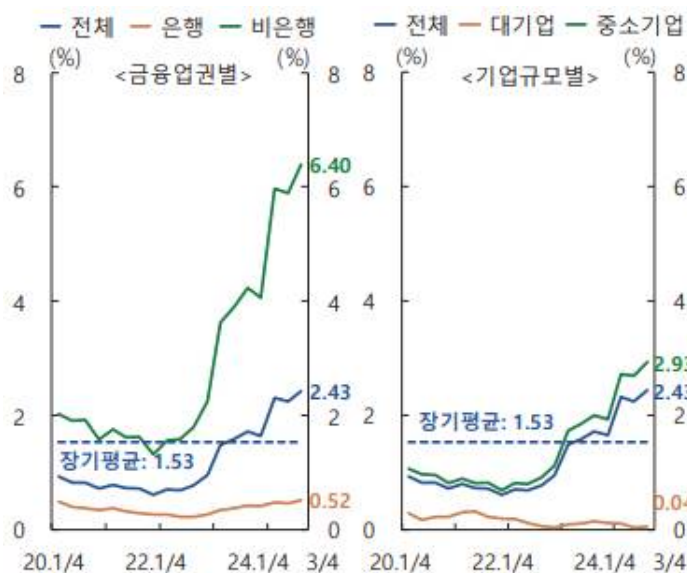
[그림 2]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¹⁾ 가계대출 연체율²⁾



- 주 :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 등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3)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 ~ 2024년 3/4분기 중 평균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3] 금융업권¹⁾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²⁾



- 주 :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2) 규모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4) 장기평균은 2010년 1/4분기 ~ 2024년 3/4분기 중 평균, 전체 기준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내수경제를 보면 [표 4]와 같이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부진할 예정이다.

민간소비는 늘어난 가계부채, 정치 불안, 고용환경 악화, 자산시장 불안정 등으로 부진할 것이나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PF 부실 잔존,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주택건설 수주·착공 감소,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AI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나, 세계경제 위축(EU, 중국, 일본 등 선진국), 수출전망 악화 등으로 성장세는 제약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금리인하에 따른 비용감소, 유가 약세 등으로 2.0%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공공요금 인상, 환율 불안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존재한다. 지난해 물가가 높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2.0% 인상이므로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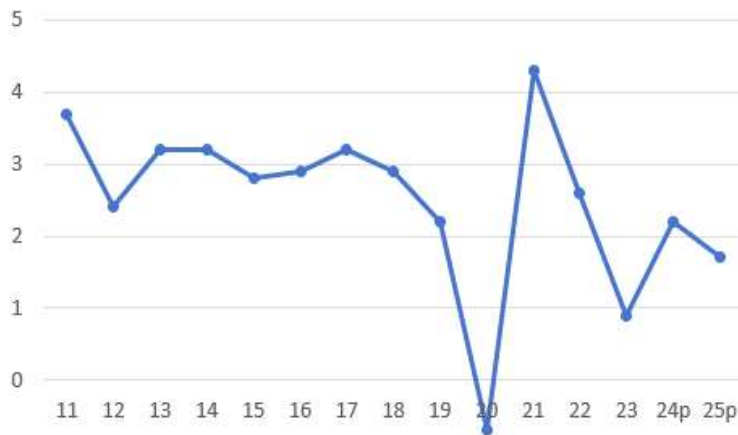
[표 4] 2025년 한국경제 전망(%)

구분	2023	2024	2025(E)
경제성장률	1.4	2.1	1.7
민간소비	1.8	1.3	1.6
건설투자	1.5	-1.6	-1.2
설비투자	1.1	1.1	2.7
소비자물가	3.6	2.3	2.0

출처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4, 2025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수출과 내수의 침체로 한국은 L자형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2010년대 3%대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 수준으로 하락하여 정체되고 있다.

[그림 4]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자료: 통계청, 2025년은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세계경제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체계에서, 트럼프 이후 반세계화, 보호무역으로 블록화, 다극화되고 있다. 대전환 시기 대부분 국가가 중립적인 외교통상과 확장재정으로 자국 산업과 고용을 지키고 있으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친기업 반노동 시장만능 정책으로 일관했고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 제재에 동참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 속에 저출생 고령화가 겹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었다.

대외의존과 불평등이 구조화된 한국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다음과 같이 사회개혁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자주적인 외교통상 정책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 자국 산업과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부자증세와 확장재정의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의료, 교육, 주거, 돌봄,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무상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건강권, 생명권, 정치활동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광석TV, “OECD가 본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경제 읽어주는 남자, 174화, 24.12.22
- 나원준, “내수 회복은 언제”, 경향신문 경제직필, 24.12.17
- 나원준, “트럼프 귀환과 다극화 전망”, 경향신문 경제직필, 24.11.19
- 류덕현, “비상계엄과 탄핵의 경제적 비용”, 동아일보 경제직필, 24.12.30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25.1.1
- 정영식, 「2025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11.14
- 주원 외, 「2025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성장경로 이탈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4-1, 24.12.06
- 최배근TV, 정치리스크로 무너지는 부채 모래성, 24.12.31
- 최배근TV, 내란 세력 척결이 늦어지면 남은 기동도 무너진다. 24.12.30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4.12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11
- OECD(202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2, December 2024